서훈 전 실장 등 文정부 외교 · 안보 핵심인사들, 서해 피격사건 관련

"월북 표명 SI 자료 삭제 안해"

"월북 의사 표명한 상황과 억류 상황 달라
SI첩보에 '월북 의사' 표명 내용 포함돼
자료는 현 정부가 보유… 모든 자료 공개를"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탈북자 북송 사건에 대해 "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당시의 자료들을 정확히 살펴본다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들은 SI 첩보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이들은 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에 반박했다.

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0년 9월22일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실종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해 생사가 우려가 되던 상황에서 북한에 의해 발견되고 구조가 되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실은 곧바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서해상에서 수색 작전 중인 해수부·해경 등과 상황을 공유했다"며 "이런 상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메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나 당시 상황은 메뉴얼이 적용되는 상황과 달랐다"며 "'월북 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메뉴얼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건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서는 "은폐를 시도했다면 관계장관들과 보좌진들까지 7~8명에 이르는 인원이 심야에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2020년 9월23일 1시 회의 이후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면 국방부는 어떤 자료를 분석해 2020년 9월24일 분석보고를 했다는 것이냐"며 "올해 10월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첩보 원본이 존재하고 현재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월북몰이가 아니냐는 억측에는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시킨다"며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되냐"고 반문했다.

월북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기상상황과 실종자의 승선 경력 등을 고려하면 실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다"며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었지만 북측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돼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은 가능성은 '월북'"이라며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사람이 실종된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담긴 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2020년 9월24일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SI 첩보 분석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북한 어부 2명은 북한지역에서 선장을 비롯해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라며 "이들은 나포 이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처벌을 우려해 귀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남아 있으며 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접근도 할 수 없음을 기회로 현 정부는 선택적·자의적 공개를 하며 실체규명이 아닌 정치보복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미 SI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뉴시스

서훈(왼쪽부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직장 성평등 실현,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 선행"

김슬지 도의원, '올 2차 청년 성인지 토크쇼' 패널 참여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27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2차 청년 성인지 토크쇼'에 패널로 참석했다.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북본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도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성평등'을 주제로, 김슬지 도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및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슬지 의원은 "직장에서의 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육아휴직 이후, 회사에서 오랜 시간 일을 쉬었다는 이유 등으로 복직이 쉽지 않은 것과 더불어 주 양육자가 엄마로 자리잡으면서 출산 후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회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지난달 발표된 OECD의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도 부끄럽지만, 한국 내 성평등에 대한 주요 원인이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법률적 지원과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슬지 의원은 "직장 내 성평등한 문화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더 나은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공감을 끌어내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당당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힘껏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수기자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별자치도화 반드시 이뤄져야"

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특위
국회 행안위 등 찾아 면담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27일 국회를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방문 일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채익 위원장과 유석조 수석전문위원, 도내에 연고지를 둔 정운천, 한병도, 이용호, 안호영, 양경숙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 전반을 주도한 김희수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 면담 과정에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전라북도가 오랜기간 마주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특례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도내 국회의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염영선 부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안은 무엇보다 정치이해 관계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내 정치권의 원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회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일념 하에 한 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드린다"라고 뜻을 전했다.

현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지난 4월 안호영 국회의원 발의안(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난 8월 정운천 국회의원 및 한병도 국회의원이 각각 제정한 발의안(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며,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특별법 설치에 긍정적인 뜻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많은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일정을 마친 후 김희수·염영선 의원은 "오늘 활동을 통해 특별법 제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한다"며, "온 도민의 염원이 현실이 되기까지 관련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가축 방역, 과할 정도로 강력 대응해야"

김관영 도지사,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타 통과 격려도

가축성 전염병 위험성이 도래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가축 방역,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로 강력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7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지난 20일 부안군 계화조류지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별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으로 25일 최종 판정됐다. 올해는 많은 개체의 철새가 일찍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강원도와 경기도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야생 멧돼지도 지속 발견되고 있어 세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겨울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시군과 협조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차량도 철저하게 소독하고 방역시설도 신속 설치토록 당부했다.

그는 "도지사가 직접 방역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담당 부서에서 현장방문·점검할 대상을 선정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타 통과 추진 등 현안 사업 추진 부서를 격려했다.

그는 "어제 1조원 규모의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확정으로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또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3번)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그간 예타통과 대응 및 선정에 노력해 준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본 사업을 통해 국제협력·관광레저용지 접근로 확보로 민간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국내외 자본의 투자와 기업·사람이 새만금에 몰려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차별화된 개발 전략 및 기업유치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지사는 도정 최우선 과제인 기업유치를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정부정책과 연계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내 공장에 설비를 추가하기만 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혜택도 가능하여 국내복귀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우리도 차원의 규제개선, 세금감면, 물류비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주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실국장에게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간부회의를 통해 1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반드시 3번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국회 국정감사 후속대책 마련, 공무원 1:1 경력 개발·관리, 2023년 도 예산편성 등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김경수 기자

윤정훈 도의원, 무주 위임국도 37선 도로 찾아 현장점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27일 무주군 위임국도 37호선 도로 현장을 방문해 주민 건의사항 전달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사업 시급성을 감안해 2022년도 위임국도 예산 활용, 복구하기 위해 신속히 이뤄졌다.

먼저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비탈면 정비 조성 현장에 방문해 관계 공무원과 사업 현장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수렴, 향후 개선사항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집중호우 시 배수 단면 부족으로 도로가 유실되는 설천면 두길리 배수로 정비 △도로 측구 지반침하 및 세굴로 배수 기능이 상실된 무풍면 삼거리 등의 사업장을 방문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윤정훈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미비한 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속도'

민주 신영대 의원, 지역현안 특교 59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특교 5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명도항 경사식 선착장 조성사업이다.

사업비 34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서군산 복합체육센터는 건립사업은 서군산 지역을 아우르는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간 동군산 지역에 치우쳐 있던 체육 인프라 시설을 서군산 지역으로도 확장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추진되었다. 3급 공인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2024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는 15억원이 배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군산 산단 내 부족한 문화·체육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근로자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내년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행안부 특교 확보로 사업비 부족분이 보강되면 공사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명도항 경사식 선착장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특교 10억 원을 확보했다. 현재 고군산 카훼리호 운항 노선 중 명도에만 유일하게 차도선 선착장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관광객 유입을 저하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번 특교를 통해 낙후한 어항시설을 개선하고 관광 및 어촌 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특교를 확보하게 돼 기쁘다"라며, "생활밀착형 복합복지시설 확충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도의회 문화 ·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 종교현장 답사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관광사업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연)은 27일 종교문화유산 관련 김제, 부안 등 도내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연구회는 먼저 불교와 기독교 등 4대 종교 유산이 문화재로 등록된 김제를 찾았다. 이어 1948년에 개원한 호남지역의 유일한 천도교 수도원인 부안군 상서면에 위치한 천도교호암수도원 부안교구를 찾았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